

소득 3만불 시대 포용국가 구축 총력

정부가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능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감행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복안도 내놔왔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일부 정책은 순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경제가 잠재성장률(2.8~2.9%)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특히 정부가 분배 정책에 역점을 두고 고도 성장의 온기마저 고루 퍼지지 않고 되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보니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음을 자각했다.

고령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후 국제적 흐름에 따라 포용성정의 하나로서 사람 중심

정부, 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에 '방점'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력의 저하와 산업구조 개혁의 지연,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내년 경제 정책의 축으로 삼아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기로 했다.

먼저 상반기 중 '6조원+' 규모의 기업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1조6000억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3조7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2000억원, 서울 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 5000억원 등이 해당된다.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패키지

투자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광역권 대표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중 조기 착수로 한다.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재정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6% 조기 집행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규모는 54조1000억원으로 올해(44조6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린다.

철예한 이해 관계로 풀기 어려운 수많은 과제를 중 4가지는 내년중 반드시 해결한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고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등에 대해·반납 구역 제한없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기준을 만든다.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패키지

지원방안과 임금 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안도 마련한다.

과거와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낼 수 있는 산업부문 혁신은 드라이브를 건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짰 뒤 우선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과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은 상반기 중 세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보강을 위한 재정·세제·제도 과제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 늘린다. 청년에 대한 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 근로자구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대폭 확대되 EITC를 더 빨리 주기 위해 6개월(반기)로 쪼개 지급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막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통해 소상공

인·영세자영업자의 숨통도 트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상반기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돕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제도 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 우려를 조기 불식하고 노동시장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도 취한다.

최저임금 인상(10.9%)의 영향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이달중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하위 개념인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방식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포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주 52시간제 보안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안'은 2월 중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투자·준비를 본격화한다.

장래연구추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맞게 보건의료·노동·교육·국토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새로 짤다. 상반기중 고연봉·고학력·고경력

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내국인의 국내 복귀 시 5년간 소득세의 절반을 깎아주기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 2만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은 최대 월 200만원으로 늘리고 아바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월 200만원→250만원)은 50만원 인상한다.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남북 경제협상 추진을 위한 협의체법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때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투자구상 구체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의 공조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구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분배 어려움이 계속되고 내년 여건이 더욱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도전 요인까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 처방을 나름대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처방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여성·신중년·노인'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

청년 고용장려금 2배 수준 확대, 내일채움공제 25만5천명 늘려
고졸·여성 채용 늘려, 신중년 일자리 2500명 규모 신설 등
어르신 대상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기로

내년에도 청년, 여성, 신(新)중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계속해서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과 장학 사업 등이 확대된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늘린다. 초등학교는 11만6000원에서 20만 3000원으로, 중·고등학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학생·대학생 1500명에게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장학 사업을 신설한다. 초등학교·고등학교 1500명에게 월 35만~45만원이 지급되는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도 함께 만들어진다.

전문대학원생에 내년도 신입생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중이 확대된다. 의학·치의학·한의학과 분야에선 정원의 5% 이상 선발을 신설하고 법학 분야에선 정원 내 5%이던 것에서 7% 이상으로 확대한다.

실제 고용 현장에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3417억원에서 내년 6745억원으로 늘린 상태다. 지원을 받는 인원은 9만1명에서 18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5만5000명에서 내년 2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역시 지원 규모가 올해 4만명에서 내년 8만명으로 2배 늘어난다.

생명·안전, 현장·기술 분야 등 공공기관에선 고졸 채용을 늘린다. 기관별 적합 업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점검하는 식이다. 이는 경영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주어진다. 3년 정기 근로감독 및 1년 주기 세부조사를 면제하고 신용평가·급리 등에 대한 우대할 제공한다. 출입국 익스프레스 라인(express line)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안전·여가 등 2단계 사회서비스 부문에선 17만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안전지원, 성폭력 피해 지원, 장애인생활지도사,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 등이다.

여성 고용도 늘린다. 돌봄 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 1만8000개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아이돌봄(2.3만~3만명), 노인돌봄(3.6만~3.8만명), 장애인활동지원(6.2만~7만명) 등이 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도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6만

원에서 7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때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2년간 인건비의 일부(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식이다. 경력 단절로 인정되는 사유로 임신·출산·육아에 더해 결혼·자녀 교육을 추가하고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9세 연령층을 일컫는 신중년을 위해 경력형 일자리가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특정 분야에서의 경력·전문성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에 따른다.

"신중년을 위한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늘리고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해 적합 직무를 추가 선정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중견기업엔 월 40만원, 중소기업엔 월 8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신설한다. 노인 일자리 역시 올해 51만개 수준이던 것을 내년엔 61만개까지 늘린다.

계층별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지침·고시 개정 등 집행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내년부터 본격 추진

매출액 규모 따라 수수료 달라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생계형 적합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없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도입된 '서울페이'로 구체화됐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제 수수료가 달라진다.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가 0%다. 반면 8억~12억원 구간일 경우 0.3%, 12억원 이상일 경우 0.5%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용자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공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incenive)를 제공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내년 하반기까지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김영태 기자

김중희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법안 대표발의

'한국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7일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여성농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농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남성농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국내는 여성농업



인을 격려하기 위한 여전한 행사가 없다며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념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가 주요골자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사법개혁, 내년 4월 마무리"

박영선 "단계적으로 가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법개혁을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모두 사법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체회의만 8번, 소위 회의가 각각 2번씩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이 잡혀가는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한 의견을 한 곳에 응집시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더라도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투 트랙'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검증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려면 법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 역시 이들 3대 핵심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일단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문화하러다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성패는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 접근에 달려있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70년 만에 법원의 전체 틀을 흔들고 싶은 것만은 단계를 거쳐야 체계적인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법특위에 제출한 법원개혁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일각에선 당초 사법발전위원회의가 마련한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법원이 그 정도라도 의견을 모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온건한 법은 거의 준수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

여야 27일 임시국회 본회의 합의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경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뉴스